

정책동향

국내 무역전시회 지원 수요조사

내년도 전기전자부문 국내 전시회에 총 24억3천만원 정도가 쓰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내년도 국내 무역전시회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로 모두 112개 전시회에 231억6천600만원을 지원 요청한 가운데 이중 전기전자업종은 24억3천200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업종의 전시회별로는 전기산업진흥회 주최로 개최되는 ▲서울 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1억2천만원을 비롯 ▲국제 조명박람회 3억 ▲2차전지 및 관련 원부자재·생산장비전시회3억 ▲국제디스플레이전 2억 ▲서울오디오페어 2억 ▲KPCA쇼 2억 ▲국제표면실장 및 인쇄회로기판전시회 2억

▲국제정보보호 및 보안기기전 1억 ▲한국전자전 5억 ▲나노 코리아 1억 ▲한국반도체산업대전 1억 2천▲IMD에 9천200만원 등 총 12건에 24억3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2003년 전시회 지원에 산 편성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이를 참고로 올 11월중에 지원대상 전시회와 지원규모를 심사·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유망 전시회 및 차세대 전시회를 선정, 전시회 개최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총 20개 전시회에 33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제어반 핵심기술 국산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제어반의 핵심 기술이 국산화 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8개월간에 걸쳐 중기거점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차세대분산제어(DCS) 및 집중



정책동향

원격 감시제어(SCADA), 선박통합제어시스템 등 공정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산화한 차세대 분산제어(DCS), 집중원격 감시제어(SCADA)는 선진국의 기술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자동제어 분야 기술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포항제철,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국가산업시설에 설치해 운영할 경우 국가기간 설비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술개발 완료와 동시에 400억원의 매출과 60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매년 20%이상의 매출신장이 기대된다.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업체 비율조정등 검사대폭 강화

정부는 램프류등을 수입할 때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수입물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일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104개 업체에 대해 수입신고시 일반 수입물품보다 검사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검사방법도 선별검사에서 전량 개장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국 등 WTO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우회수입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에 대비, 고의성이 포착

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작년 한해동안 수입물품 선별 검사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총 4천 500여건을 적발했다.

특히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 정모씨등이 6억원 상당의 중국산 폴리메릭램프 1만 584개와 파이롯트 램프 1천 63만2천여개를 원산지 표시없이 수입하거나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벤처기업 옥석 가린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정비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실

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단계로 3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정책동향

의 휴·폐업과 현행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했으며, 전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능력 평가를 실시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벤처기업이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혁신능력을 평가해 보는 자가진단과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현장평가 등 2단계로 진행되며 혁신능력평가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2종류로 구분된다.

평가항목은 제조업부문은 92개, 서비스업부문은 9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결과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분류해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부실 벤처기업의 구분을 위해 98개 기업의 벤처확인을 취소하고, 109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중에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는 벤처투자기업 1천517개와 연구개발기업과 신기술 기업중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1천752개 등 총 3천279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심사중이다.

중기 생산현장 IT접목 정보화 지원사업 가동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현장에 IT를 접목, 디지털화하는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2005년까지 약 1천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CIM(컴퓨터통합생산), MES(제조실행시스템), POP(생산시점관리)등 생산정보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중소제조공장의 'e-Manufacturing'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생산정보화 추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고 50%까지 5천만원 한도에서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e-Manufacturing'이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생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의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제품의 생산주기 감소, 생산리드타임 단축, 서류작업 감소, 품질향상, 운영비용절감, 기술변경 소요기간 단축 등 생산성을 크게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과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공정 개선에 정보화가 시급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 선정 중소기업은 생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공정분석, S/W 및 D/B개발(교육 컨설팅 커스터마이징 포함)등 정보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정책동향

2005년 세계 특허법 통일

2005년경에 세계의 특허법이 통일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미국이 그동안 통일화 논의의 최대 장애 요소였던 선발명주의를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면 2003년경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돼 2005년경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허청은 통일화에 대비 2004년까지 특허법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경 특허절차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과 산업계, 변리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통일화기획단을 통해 국제협력,

특허법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및 대외홍보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면 발명자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지난 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0년 6월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조약의 타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산업 육성 1,650억원 지원

산자부는 부품·소재산업을 21세기 성장 견인 산업으로 육성키위해 무역센터에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1,6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육성, 수출 1,475억불 무역

수지 흑자 500억불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비전하에
▲차세대 핵심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
▲신뢰성 향상을 통한 시장 진입촉진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부품·소재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지원 등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



정책동향

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1,140억원을 투입, 50개 이상의 시장 선점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 3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키 위해 산

업은행의 벤처자금 200억원과 산자부의 산업기반자금 100억원을 활용한 '산업기반기금 연계형 부품·소재종합투자펀드'를 경성하고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오는 11월 부품·소재분야의 유망 수출 기업 50개업체를 '부품·소재 수출 견인 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술혁신 중기 180억 지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발굴한 355개 과제와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선정시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18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정부가 공고한 기술개발 전략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의 75% 한도내에서 기술 난이도에 따라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출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전략과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선별한 것으로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 80개, 섬유, 화학 분야 66개 등 총 335개 과제다.

신청자격은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만 가능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소기업은 공장 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인정해줄 방침이다.

전기분야 기술혁신과제

전기분야 기술혁신과제
변성기용 코일의 절연기술
그래픽카드용 RenderingProcessor 설계기술 Translation & Lighting Unit 설계기술 고대역폭 메모리 구조 설계기술
리액터 코일의 절연물 코팅 및 몰딩기술
배터리 충전기 제어회로
UPS용 스위칭 제어회로
정류기 전력기기 구성 기술
계전기(전압 60V이하)의 접점 재료 기술
소형정밀모터용 고정밀 가공/조립 기술
신호 발생 주파수의 안정화기술
피복전선용 절연도료제조합성기술
개폐기 정밀 기계구조 설계기술
전력용 축전기 유전체 및 전극제조 기술
태양전지 재료 제조기술
탄탈 콘덴서용 소결체 소성기술
축전기 전해질 제조 및 합침기술
에폭시 PCB용 에폭시 가교화 기술



정책 동향

한전, 배전분할 연기

한전의 배전 분할 시기가 당초계획보다 1년 4개월 늦춰진 2004년 4월로 연기됐다.

산자부는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공기업민영화추진 위원회에서 이같은 한전의 배전분할방안을 상정,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산자부의 이번 결정은 관련법 제정과 발전부문 분할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넘게 지연된 데다 배전 경쟁시장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우선 배전분할에 앞서 올 연말까지 배전 사업소를 6개 사업본부로 분리해 2003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운영, 배전경쟁시장 구축에 대비키로 했다.

분리방법은 ▲서울 강북지역·경기북부지사 ▲서울 강남·인천지사 ▲경기·강원·강릉지사 ▲충남·충북지사 ▲대구·경북·전북지사 ▲부산·경남·전남·제주지사 등 6개지역으로 분할된다. 이 분할방안에서 영남과 호남지역은 별도의 회사로 분할치 않고 남북으로 나눠 2개사로 분할하는데 이는 향후 경쟁체제가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요금갈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對中 수출 전기업체 '비상'

산업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CCC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CCC마크를 획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란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앞으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국현지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제품들은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 및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인증대상 총 132개 품목 중 70개 품목이 전기·전선품목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업체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전선 및 케이블 5종 ▲전기 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종 ▲저압형 전기장비 9종 ▲저공률 전동기 1종 ▲전동공구 16종 ▲전기용접기 15종 ▲생활용 전기제품 18종 등이



정책동향

이에 해당된다. 한편 CCC마크 획득을 위해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와 기술문서 및 시료 등을 중국 인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도소매업자나 수입업자가 신청을 할 경우 기본제출자료 외에 제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이나 수입업

자와 제조자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만일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명기된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약 480만원 상당의 벌금을,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약 1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시급

수출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업계의 시설 투자 수요 증가에 맞추어 정부가 정책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시설투자용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축소되면서 업계의 시설 자금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자금력이 충분치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할 전망이다. 정부의 산업기반자금은 지난해 5,700억원에서 올해 3,274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도 7,5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 배정됐다. 정책자금의 적용금리도 지난해 거의 인하되지 않아 산업기반자금은 5.9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6.25%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많다. 무역협회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정부의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출업체를 비롯한 업계의 전반적인 공급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수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협은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최소한 올해 설비투자증가율(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며 산업기반자금은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도 8,0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무협은 또 금리수준도 은행의 금리 인하 폭을 감안하여 4.5%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며 정책자금을 용자받아 도입하게 되는 기계/시설 등을 정책자금 용자에 대한 담보로 100% 인정하여 업체의 추가담보제공을 생략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뒤에 계속...



정책동향

정책자금별 지원규모 확대안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A)	개선안(B)	증액(B-A)
산업기반자금	5,700	3,247	6,000	2,753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7,500	7,000	8,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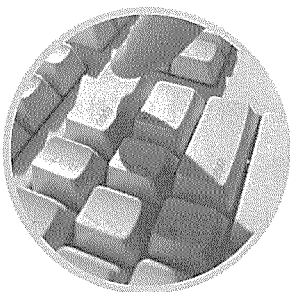
자금별 금리인하 방안

산업기반자금	5.91% → 4.5%(1.41%p 인하)
중소기업지원자금	6.25% → 4.5%(1.75%p 인하)

정책자금별 지원규모 확대안

(단위: 연리)

구 분	2001년	현행(A)	개선안(B)	인하폭(A-B)
산업기반자금	5.75~6.0%	5.91%	4.5%	1.4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지원자금	6.25~6.75%	6.25%	4.5%	1.75%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